

	<h1>보도자료</h1>	<h1>충남도당</h1>
<p>2019년 5월 09일(목)</p>	<p>대변인 : 김 연(010-3355-4074) 담당 : 박종만 정책부장(010-2740-9856)</p>	
<p>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신부더샵 3층 / 041-569-1500</p>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토론회 개최
- 여기구 도당위원장 “충남 성장 동력으로 혁신도시 반드시 필요”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여기구)과 홍성·예산 지역위원회(위원장 강희권)는 5월9일(목) 오후 2시, 홍성군 홍북읍 소재 J컨벤션웨딩부페에서 ‘내포 혁신도시 지정과 분권형 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포신도시 주변에서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성명서 낭독과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였다.

여기구 충남도당위원장과 강희권 홍성예산지역위원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약 100여 명의 청중이 운집한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구체화하고, 충남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개최되었으며,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집권 여당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과 논리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 내포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한 인구증가 및 지역활성화를 예상하며, 세종시 분리에 따른 충남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여기구 충남도당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수직적 분권과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와

자원을 나누는 수평적 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국 충남도의회회장은 축사에서 “충남은 세종시라는 ‘자식’을 독립시키고 집안이 흔들린 격”이라며,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 마음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반드시 관철시키자”고 말했다.

이어 첫 발표자인 정환영 공주대 교수가 ‘분권형 균형발전과 혁신도시’를 주제로 발표했고, 두 번째로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충남 내포혁신도시 육성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강희권 지역위원장을 좌장으로 조승만 충남도의원(홍성1선거구), 김만겸 예산군의회 부의장, 이상선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강희권 지역위원장은 “1기 혁신도시의 영남 편중이 국토균형개발을 망쳤으므로 2기 혁신도시에서는 충남 등 1기에서 소외된 ‘도 지자체’가 우선 지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내포신도시 주변에서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성명서 낭독과 거리홍보 행사가 이어졌다. 홍성예산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참석한 거리홍보 행사에서 강희권 지역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구체화하고, 충남도청 소재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충청도당은 문재인 정부의 분권형 국토균형발전을 구체화하고, 충청도청 소재지로서 내포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의 학습과 토론,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이에 따른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관철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다음

- 내포 혁신도시 지정은 편중된 국토의 균형을 회복하는 '국토 균형발전'의 일환이며, 세종시 분리로 인한 충남 역차별을 해소하는 첩경이자 사필귀정이다.

- 혁신도시 2기는 '낙후도'를 배려한 '형평성'이라는 국토균형개발법과 혁신도시법의 기본원칙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혁신도시 1기의 영남권 '편중' 같은 국토 '기형개발'을 반복하면 안된다. 정부는 '균형'을 회복하고 편중을 막기 위한 '편중방지안'을 수립해야 한다.

- 혁신도시 2기는 1기에서 편중된 지역을 배제하고, 제주·강원·전북·충남 등 낙후된 '도 지자체'에 우선 지정해서 심각한 국토의 불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은 문재인 정부의 '환황해권 중심도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며,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동서축 강화 정책'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 문재인 정부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구체화하고, 충청도청 소재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결의

- 국토 '기형개발' 막기 위해 혁신도시 '편중방지대책' 수립하라!

- 2기는 1기의 '편중지역' 배제하고 '도 지자체' 우선 지정하라!

- 내포 혁신도시 지정으로 충청남도 역차별 해소하라!

- 내포 혁신도시 지정으로 '환황해권 중심도시' 공약 실천하라!

2019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 · 홍성예산지역위원회